

구조조정분쇄! 노동강도강화저지!

산업재해대책마련공동투쟁위원회(준)

출범 기자회견

일시 : 2002. 5. 29(수) 오전 11:00

장소 : 느티나무

순 서

- 인사말 및 경과설명 (공투위(준) 집행위원장)
- 기자 회견문 낭독 (백순환, 민주노총 비대위 위원장)
- 사업계획 설명 (신동근, 보건의료단체 연합 공동대표)
- 질의 응답

<붙임자료>

- 1) 기자회견문
- 2) 활동계획안
- 3) 노동자건강실태

[기자회견문]

구조조정 분쇄! 노동강도 강화 저지!
산업재해대책마련 공동투쟁위원회(준)
출범 기자회견

김대중 정부는 출범이후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구조조정을 통한 노동시간 유연화 및 임금시장 유연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이에 발맞춘 자본은 경영 합리화의 이름으로 전 산업에 걸친 구조조정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목자르기 식의 획일적인 구조조정하에서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자본의 전략은 고용불안정 지속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증 그리고 노동강도 강화에 따른 노동자 건강의 심각한 훼손 문제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즉, 자본측의 노동강도의 강화전략은 1) 해고 등 인력감축이라는 구조조정 속에서의 동일 생산량 추구 2) 동일 노동력 조건에서 증가된 생산량 추구 3) 비정규직 및 하청 노동자의 고용확대를 통한 노동강도 강화 4) 생산체계 자체의 변화를 통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른 구조조정과 연동된 노동강도의 강화로 인한 산업재해 문제는 1) 반복성 작업 노동자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의 심각한 증가 2) 심리적 스트레스와 압박감의 증가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의 증가 3) 불안정 노동의 증가와 노동환경의 악화 4) 사망재해 및 노동재해의 급격한 증가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자본의 필요성만 무성하게 강조되었을 뿐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조건에 대한 대대적 변화인 고용불안정, 비정규직 증가, 삶의 질 저하, 빈부격차 등은 도외시 되어왔고, 이러한 노동조건에 의해 유발되는 노동자 건강의 악화 문제는 철저히 외면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노동조합 및 민주노동 진영의 대응도 전체적으로 모색되어 오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산업재해 및 노동자 건강의 악화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있습니다. 2001년의 산업재해자는 2000년 대비 18.06% 가량 증가되었으며, 사망자 수 또한 8.70%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2000년 현대자동차 제5공장(정공본부)의 근골격계질환 집단 직업병 발병사례와 최근 대우조선 노조의 집단 직업병 발병과 직업병 인정투쟁은 일방적 구조조정에 의한 노동강도강화와 이에 따른 노동자 건강의 악화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은 구조조정과 노동강도강화가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써 공공서비스업, 보건의료산업, 건설업 및 사무직 등 산업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직업병이 되었습니다. 근골격계질환의 문제는 몇몇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일상화된 시대를 살아가는 전체 국민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근골격계질환의 집단발병과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구조조정에 의한 노동강도 강화 저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어떤 대책도 미봉책일 뿐입니다. 즉 구조조정을 분쇄하고 노동강도 강화를 저지하고 않는 한 1,300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의 확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조조정분쇄!, 노동강도 강화저지!, 산업재해 대책마련 공동투쟁위원회(준)는 발족과 더불어 향후 하루에 10명¹⁾의 노동자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행위로 죽임을 당하고 한해 2,7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죽임을 당하는 한국의 심각한 산업재해

1) 2001년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748명임. 이를 년 실노동일 수 291.72일로 나누면 하루평균 약 9.4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것임

현실과 노동강도 강화에 따른 노동자건강의 악화의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죽지않고, 병들지 않으며,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안전보건 투쟁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산업재해의 심각성과 노동자 건강의 악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김대중 정부와 자본이 구조조정이라는 명목하에서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노동유연화, 노동강도강화, 궁극적인 현장통제 전략을 분쇄해 나갈 것입니다.

2002년 5월 29일

“구조조정 분쇄! 노동강도 강화 저지!”
산업재해대책마련 공동투쟁위원회(준)

사회진보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노동건강연대, 민중의료연합, 노동자의 힘, 경기남부 산업보건연구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광주노동건강상담소, 건강한노동세상, 대구산업보건연구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 산업노조,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외국인노동자 대책 협의회, 전국민중연대(준)[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준), 기독교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 협의회, 반미여성회(준), 보건복지민중연대, 범민련남측본부, 사회당, 사회진보를위한민주 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무순)

[활동계획안]

구조조정분쇄!, 노동강도강화저지! 산업재해대책마련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준)는 노동, 시민사회, 인권, 보건의료, 노동보건, 정당 등 전 사회적 참여를 통하여 김대중정부와 자본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분쇄하고 구조조정반대 노동강도강화 저지, 산업재해 근본적 대책마련을 위한 모든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특히 월드컵을 빌미로 노동탄압을 전면화 하는 김대중정부의 이면에 심각한 산업재해의 현실과 노동자 건강의 악화의 현실이 있음을 전세계에 폭로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강도 강화를 통한 근골격계 질환이 전국민의 직업병이 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알려내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경제위기 이후 자본의 이윤을 보장해 주기위해 취해왔던 일련의 작업장 안전규제 완화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증가된 비정규노동자 및 영세, 하청 사업장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과 노동강도 속에서 심각하게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을 알려내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주요요구 사항

- 산재직업병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조항의 조속한 법제화
- 노동자가 참여하는 근골격계질환 예방프로그램 법제화
- 산재직업병 다발 사업장 역학조사와 임시건강진단 실시 및 기관 선정에 노동자 참여 보장
- 산재보상 '선보상 후평가' 방식으로 제도개선 및 산재노동자 직장복귀 법제화
- 안전보건규제완화 원상회복 및 ILO 협약 155호의 조속한 비준

일정별 주요 사업계획은,

- 6월 : 산업재해추방과 작업장 안전대책 마련 공동캠페인
 - 일시 : 6월 한 달간 8개 지역에서 거점선전전 진행(산재사진전, 유인물 배포 등)
 - 지역(담당) : 부산(민의련부산지부), 대구(산보연), 인천(건강한노동세상), 광주(노건상), 전주(군산노집), 수원(경기남부산보연), 울산(울산산추련), 서울(산재노협, 민의련, 노건연)
 - 지역 집중선전전 : 6/10 - 15 민주노총 집중 홍보 주간
 - 중앙상경투쟁 : 6/21, '구조조정분쇄, 노동강도강화저지 산업재해대책마련 결의대회'(가

칭) 민주노총 주최

- 유인물, 산재사진물 : 5월말까지 중앙에서 제작, 배포
- 홍보티셔츠 제작 : 최소 100벌 제작, 배포

- 6월 - 8월 : 지역 순회 교육(또는 간담회)
 - 공투위 활동과제 등에 대한 교육

- 7월 : 근골격계직업병 집중 선전전과 집단요양신청 투쟁
 - 집단요양신청 투쟁 전개 : 지역별로 근골격계직업병 등에 대한 집단요양신청 투쟁
 - 단위사업장, 지역, 중앙차원 대책마련 요구 : 노동자가 추천하는 기관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보건진단 요구

- 7월 - 10월 : 근골격계질환 실태조사(보건의료노조, 공공연맹, 화학섬유연맹 중심)
 - 공동연구조사단 구성
 - 연맹별 설명회, 실태조사분석, 결과발표

- 8월 - 12월 : 안전보건규제 원상회복, 산재보험제도개혁 투쟁 등 법제도 개선 투쟁
 - ILO 협약 155호(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협약) 비준 촉구(안전보건제도 변경 시 노동자 대표의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내용)
 - 산재직업병에 대해 '선보장 후평가' 로 현행 제도개선과 산재노동자 직장복귀 등 법제화

- 10월 : 근골격계직업병 실태 백서 발간
 - 김대중 정부이후 근골격계 등 산재직업병에 대한 실태와 정부정책 등을 종합 분석

[노동자건강 실태]

1. 반복성 작업 노동자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의 심각한 증가

▶ 2001년 금속산업연맹에서 산하 80여개 노동조합 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한 “근골격계질환 증상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국 NIOSH 기준인 【근골격계질환 증상이 적어도 1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혹은 지난 1년간 1달에 한번이상 증상이 발생한 경우】는 전체대상자의 평균 53.1%에 달하고 있으며, 기준의 엄격한 적용으로 당장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분류 할 수 있는 기준인 【근골격계질환 증상이 적어도 1주일 이상 지속되고, 지난 1년간 1달에 한번이상 증상이 발생 하며, 증상의 정도가 ‘심한 통증(작업중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 혹은 ‘매우 심한 통증’(통증 때문에 작업은 물론 일상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을 호소하는 경우】는 전체대상자의 16%에 달했다.

▶ 대우조선의 경우 2001년 노조 자체 조사사업을 통해 1차검진 380명, 2차 검진자 262명의 검진자중에 80%이상이 근골격계 질환 소견자로 판명되었으며, 삼호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진중공업, 대동조선 등 조선업종 노동자 중 2/3이상이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을 확인했다.

2. 업무상 질병자 현황(노동부 발표)

구 분		총 계	직 업 병	작업관련성 질병				
			소계	소계	신체부담작업	뇌·심 질환	요통	기타
2001.	계	5,576	1,538	4,038	778	2,192	820	248
	요양자	4,396	1,116	3,280	778	1,512	820	170
	사망자	1,180	422	758	0	680	0	78
2000.	계	4,051	892	3,159	487	1,950	522	200
	요양자	2,937	498	2,439	487	1,292	522	138
	사망자	1,114	394	720	0	658	0	62
증감 (증감율)	계	1,525 (37.6)	646 (72.4)	879 (27.8)	291 (59.8)	242 (12.4)	298 (57.1)	48 (24.0)
	요양자	1,459 (49.7)	618 (124.1)	841 (34.5)	291 (59.8)	220 (17.0)	298 (57.1)	32 (23.2)
	사망자	66 (5.9)	28 (7.1)	38 (5.3)	0 (0.0)	22 (3.3)	0 (0.0)	16 (25.8)

3. 불안정 노동의 증가와 노동환경의 악화

▶ 고용규모 50인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사망재해의 51%가 발생했음.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50인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재해가 각각 57%와 61%를 차지하고 있음

▶ 전체 사망자 중에서 근속기간 6개월미만인 노동자가 42%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1년미만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전체 사망자 중에서 51%를 차지함.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의 경우에는 6개월미만인 노동자가 사망한 비율이 82%에 달하고, 제조업에서도 33%나 되고 있음

4. 사망재해 및 노동재해의 급격한 증가로 귀결

▶ 2001년의 산업재해자는 2000년 대비 18.06% 가량 증가되었으며, 사망자수 또한 8.70% 증가되었다.

특히 조선업종의 산업재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실정으로 대우조선에서는 지난해 8명의 노동자의 사망한바 있고, 2002년 들어서도 대우조선1명, 현대미포조선 1명, 한진중공업 1명, 현대중공업 1명, 삼성중공업 1명 등 5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등 조선업종의 중대재해는 멈춤 없이 계속되고 있다.

▶ 전국철도노조의 경우 대규모 인원감축으로 인해 지난해 34명의 노동자가 죽어가는 등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5. 정부의 안전보건 규제완화와 졸속적 대책

▶ 98년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설치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안전보건제도가 규제개혁대상 인식되면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완화, 각종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검사 완화 등 노동자 안전보건과 직결된 각종 제도를 완화, 폐지해 오고있음. 특히, 01년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주요골자인 산

재다발사업체 명단공개 등의 사업주 처벌과 관련된 내용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폭 삭제되는 폭거가 자행되었음. 또한, 국제노동기구에서는 협약 155조를 통해 안전보건제도 변경이 있을시 당사자인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있으나, 국회에서 아직 비준이 되지 않아 현행 안전보건제도를 심의하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노동자의 참여가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

▶ 정부는 2001년의 산업재해발생통계를 발표하면서 산재가 증가한 이유를 산재보험확대적용으로 분석하는 등 산재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인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강도강화 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음. 이처럼 잘못된 원인분석과 함께 정부의 산재근절대책은 노동현장의 산재를 실제 감소시키기보다는 매년 비슷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결국 산업안전보건활동에 노동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구조조정 중단과 노동강도 감소를 통한 근본적인 산재원인 제거를 내용으로 한 정부의 산재근절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규제완화가 산재 증가에 미친 직접적 폐해

- 프레스 재해는 정기검사 폐지 이전 '96년 대비 '99년 재해자수가 3% 증가 , 사망자수는 33% 증가
- 리프트의 경우 '99. 8월 용인시 건설현장에서 정기검사 항목인 피니언축의 노후로 리프트가 추락, 노동자 6명 사망
- '95~99년간 정기검사 대상품목의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한 재해중 프레스로 인한 재해의 점유율은 87%며, 리프트로 인한 사망재해의 점유율은 19%임
- 검사대상기계별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한 재해 현황

연도별	'95	'96	'97	'98	'99	평균점유율(%)
계	1,098(60)	943(61)	1,252(80)	741(52)	948(44)	100(10)
프레스	939(3)	822(6)	1,106(9)	630(5)	846(8)	87(10)
크레인	100(32)	67(23)	84(29)	58(22)	61(22)	7(43)
승강기	34(9)	28(12)	29(14)	30(13)	25(6)	3(18)
리프트	17(10)	21(16)	22(19)	15(6)	8(6)	2(19)
압력용기	7(5)	2(2)	9(8)	7(5)	5(1)	0.5(7)
보일러	1(1)	3(2)	2(1)	1(1)	3(1)	0.5(3)

▶ 공정안전보고서(산안법 제49조의2) 재작성.제출.심사제도 폐지

○ 규제완화 이전인 '99년에 342건이었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건수가 완화 이후인 2000년에 162건으로 급격히 감소

○ 규제완화 이후 사업주, 노동자, 안전관계자등이 공중안전관리(PSM)제도를 형식적으로 이행하거나, PSM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재해가 증가 추세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사업장의 재해현황

구분	'97	'98	'99	2000
재해자	248	219(△11.7%)	182(△16.9%)	226(↑19.5%)
사망자	11	6(△45.5%)	4(△33.3%)	7(↑75.0%)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제도 폐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사업자의 재해현황

구분	'97	'98	'99	2000
재해자	17,721	13,728(△22.5%)	16,666(↑21.4%)	21,070(↑26.4%)
사망자	404	287(△28.9%)	297(↑3.4%)	411(↑38.3%)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완전 붕괴

○ 안전관리자 선임현황

구분	선임사업장수(개소)	선임안전관리자수(명)
'96년	15,284명	26,027명
2000년	9,472명	11,175명
증감	△8,512 (△35.0%)	△9,171 (△35.1%)

○ 특히, 노동자 30~49명인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선임면제로 안전관리자가 크게 감소

○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수가 전체 재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7년 51%에서 2000년에는 64%로 증가(사망자수는 '97년 44%→2000년 51%)

▶ 2000년 산업재해 은폐 급증

○ 산업재해 은폐 현황

	은폐 사업장수	은폐 건수
1999년	700개소	1,812건
2000년	2,119개소	2,654건
증가율	302%	146%

▶ 잘못된 안전보건 규제완화 조치의 사례 조항

안전보건 규제완화 결과	법 내용
산업재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사전예방조치 무력화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 사실상 폐기
안전보건관리체계 붕괴 촉발 / 안전보건관리자 역할 박탈	안전보건관리자 고용의무완화/지도 조언 미이행시 사업주 처벌 조항 삭제
산재은폐 여건 조성으로 인한 은폐 급증	산재발생보고 시한 연장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 역할 권한 축소 / 지도감독 방기	지도감독 거부시 처벌조항 완화/ /보고출석의무 위반시 처벌완화/ 안전보건진단 명령 요건 완화
마지막 보호수단인 보호장구 사전안전성 확보 포기	제조·수입 인력시설기준 삭제/적격품 선정 자격제한 폐지